OPINION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특별기고

소멸 위기 먼섬, 선제적 대응 필요

김문수
전남도의원

전남도는 2165개의 섬을 보유한 '섬의 수도'로서, 전국 섬의 약 65%가 집중돼 있다. 이는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대한민국 해양영토 수호와 국가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한 해양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흑산도, 홍도, 가거도 등 국토 외곽 먼섬들은 전략적 가치와 더불어 생태·문화적 자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섬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소멸 위험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흑산도의 경우 1970년대 1만여명에 달하던 인구가 현재는 3000명 수준으로 줄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제정된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은 먼섬 정책 전환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 법은 국고보조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의 정책 실행을 가속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라남도는 '가고 싶은 섬' 사업, 한국섬진흥원 및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유치 등 선도적 섬 정책을 추진해온 만큼, 이번 특별법을 발판 삼아 보다 전방위적이고 전략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이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지역 맞춤형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 전남 먼섬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인문사회적 특성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섬별 맞춤형 발전전략과 구체적인 사업 목표, 예산 배분, 성과 지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국비 80%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되, 지방비 20%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자체 재원 마련 방안도 병행해야 한다.

둘째, 정주인구 증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개념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워케이션(Workation) 등 유연한 체류형 인구 유입, 섬 문화 체험 및 주민 교류 프로그램,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 등 다양한 인구유입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과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귀어·귀촌 희망자 대상 맞춤형 정보 제공, 주거·일자리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셋째, 필수 기반시설 확충과 스마트 섬 모델 도입이다. 원격의료 시스템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 개선, 초고속 인터넷과 공공 와이파이 등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으로 섬의 고립감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접안시설 개선, 소형공항 지원, 행정선 확대 등 교통망 강화는 주민 편의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AI·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섬 모델을 도입해 재난 대응, 자원 관리, 교통 최적화 등 섬의 취약성을 보완해야 한다.

넷째,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주민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 청정 농수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특산품 개발, 6차 산업화, 생태·역사·문화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과 사회적 경제조직 설립을 통해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하며, 주민 역량 강화와 리더십 육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도 병행해야 한다.

다섯째,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면, 먼섬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외부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어 에너지 비용 절감과 안정적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스마트섬 구축은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광자원 가치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정책 추진의 성패는 '사람'에 달려 있다. 지역 주민의 참여와 공감 없이 어떠한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행정 중심의 하향식 방식이 아닌, 주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접근이 필요하다. 주민 스스로 자신의 섬 미래를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 리더십 육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병행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는 핵심이 돼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국토외곽 먼섬에 대해 전남도에서 선도적으로 도정의 전향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먼섬은 단지 행정적 '외곽'이 아닌, 국가 정체성과 안보, 지속가능 발전의 '중심'이다. 전남도가 이러한 정책의 방향성을 주도해 나간다면, 우리 먼섬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기고

보이지 않는 위험 '밀폐공간'

김경환
안전보건공단 건설보건부장

심리학자 매슬로우(Maslow)가 제시한 인간의 욕구(5단계)처럼, 안전에 대한 욕구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 할 수 있다. 같은 견지에서 인간은 외부로부터의 위험을 오감을 활용해 감지하고, 각성해 대응하게 된다.

생태계를 구성하고 관리하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조물주의 오묘한 섭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위험, 다시 말해 인간의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해 산업현장의 많은 노동자들이 안타깝게도 계속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전주 소재 제지공장 백수탱크 내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이를 구조하던 동료근로자 4명 중 1명이 추가로 사망(나머지 3명 병원치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밀폐공간 사망사고에서는 반복되는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산소결핍된 공기, 황화수소 등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성에 대해 노동자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여름철에는 정화조, 집수조, 탱크, 맨홀 등 갇힌 공간의 경우 기온상승으로 미생물이 왕성하게 번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산소결핍, 오수·폐수·분뇨 등의 침전물(슬러지) 부식에 따른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이 촉진된다. 그리고 작업자는 산소결핍 공기, 황화수소 등이 체류된 갇힌 공간의 위험성을 모른 채 개방된 입구로 내려가고, 단 한번의 들이쉼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발생 시 동료작업자가 구조하는 과정에서 그 피해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재해자가 탱크·맨홀 등의 개구부 사다리로 내려가던 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대부분의 동료작업자들은 재해자 구조를 시도하게 되며 이는 밀폐공간에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밀폐공간 사망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 해당 작업자들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시켜야 하고, 이에 따른 예방조치와 밀폐공간 질식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에 대해 교육·훈련을 통해 숙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 사업장 내에 산소결핍, 유해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밀폐공간을 파악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밀폐공간을 찾았다면, 출입구 덮개를 설치하고 잠그는 등 후속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밀폐공간 내부로 출입 또는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관리자로부터 사전 허가(Permit to work)를 받고, 출입 전에 반드시 가스농도측정기를 사용해 밀폐공간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만약 측정결과가 적정공기기준(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황화수소농도 10ppm 미만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환기를 시켜야 하며, 급기식 환기팬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밀폐공간 질식사고 발생 시 대응요령을 해당 노동자에게 명확히 주지시켜야 한다. 일반근로자는 절대로 구조를 시도해서는 안되며, 공기호흡기(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섬유로프 등 대피용 기구를 갖춘 사업장에서 구조활동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은 근로자에 한해서만 구조활동을 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여름철과 장마철은 잦은 우수와 높은 기온상승 등으로 갇힌 공간에서의 미생물에 의한 산소결핍, 슬러지 부식에 따른 황화수소 등 위험이 커지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고, 사전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란다.

취재수첩

농협이 바꾸는 농촌의 미래

이승홍
지역사회부 부장

농촌이 한계에 다다랐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업소득 정체는 더는 이론이 아니라 현실이다. 이제는 '버텨내는 농업'이 아니라 '바꿔내는 농업'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 전남본부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1농협 1대표사업'은 주목할 만한 시도다. 각 농·축협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조합원의 수요를 반영해 대표 사업을 설정하고, 이를 지자체·중앙회·경제지주와 연계해 집중 육성하는 구조다.

고흥 흥양농협은 오이 재배 농가 60곳에 스마트팜 설비를 도입했다. 노동력 부담은 줄고 생육 환경이 표준화되면서 수확량과 품질이 동시에 개선됐다. 곡성농협은 고품질 멜론을 ICT 기반 재배법으로 '곡성 프리미엄'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고, 유통업체와의 계약 출하로 가격 리스크도 줄였다. 순천원예농협은 1500㎡ 규모의 저온유통센터를 신축 중이며, 동부권 물류 거점화를 준비하고 있다. 강진한들농협은 우량 마늘 종구를 무상 공급해 농가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거금도농협은 양파 공동재배·수매 체계를 정착시켜 생산과 유통의 효율을 높였다.

이처럼 변화는 농기계 보급이나 보조금 지급에 그치지 않는다. 지역 농협이 농정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구조로 나아가야 지속 가능성이 담보된다. 자율성을 보장하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 확산 구조가 중요하다. 각 농협의 경험이 고립되지 않고 전체로 확산될 때 비로소 지역 농정의 혁신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농협 내 조직 간 협업, 지자체의 공동 투자, 중앙회의 제도적 뒷받침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스마트농업 확대, 유통기반 확충, 복지형 지원 등 각각의 모델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하려면 자금과 기술, 인력, 제도의 입체적 지원이 필요하다.

'1농협 1대표사업'은 단순한 지역 농협의 시도가 아니다. 현장의 특성을 살린 자율 설계, 지역단위 정책 실험이라는 점에서 국가 농정의 방향 전환과 궤를 같이한다. 지금 필요한 건 이 사업이 농업 전체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 정치가 함께 뒷받침하는 일이다. 이 모델이 뿌리내린다면 전남은 물론, 나아가 우리나라 농업 전체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자투고

장마철 빗길 운전, 안전이 우선

여름철 장마가 본격 시작됐다. 이 시기 빗길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니 운전자들은 차량 점검과 함께 안전운전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빗길 운전이 위험한 가장 큰 이유는 시야가 좁아지고 제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비가 오면 가시거리가 줄어들고, 수막현상으로 제동거리가 늘어나 차량 통제가 어려워진다. 특히 야간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빗길 과속운전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이는 평상시에도 지켜야 할 기본이지만 특히 우천 시에는 감속 운행이 필수적이다.

속도를 줄이면 수막현상을 줄일 수 있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상황에 보다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다.

둘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늘어나기에, 적어도 평소보다 1.5배 이상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셋째, 차량 상태를 사전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타이어의 마모 상태와 공기압, 와이퍼의 성능, 배터리 상태 등은 빗길 사고 예방에 있어 핵심적인 점검 항목이다.

장마철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운전자는 빗길에서의 위험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철저한 준비와 안전운전으로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승환 고흥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장

사설

정부 2차 추경, 광주·전남 발전 마중물 되길

새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광주·전남 현안과 민생경제 지원 사업비가 대거 반영됐다고 한다.

광주시는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모빌리티 인공지능 전환(AX) 실증랩 조성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예산 등이, 전남도는 호남고속철 2단계 등 SOC 분야 예산이 확보된 것이다.

정부가 최근 30조5000억원 규모의 2025년 제2회 추경안을 의결했는데 광주시의 주요 사업은 5건 786억원이 포함됐다.

모빌리티 AX실증랩 조성 20억원, 도시철도 1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11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 715억원,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R&D) 10억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30억원 등이다.

특히 모빌리티 AX 실증랩은 1차 추경에 확보된 인공지능(AI) 전략 사업 예산 153억원에 더해 추가로 반영된 것이어서 AI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실증장비 구축에 속도가 붙게 됐다고 한다.

또 차세대 태양전지 실증, 초격차 스타트업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편성돼 지역 혁신기업 성장과 산업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예산 715억원도 들어가 있어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지역 건설업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또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립을 돕기 위한 광주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국비 33억6000만원도 추가 확보했다.

전남도는 14개 사업 6025억원이 편성됐다.

특히 SOC 분야의 경우 전체 추경 규모 7134억원의 20%인 1460억원(호남고속철 2단계 등 3개 사업)을 확보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 운영 출연금 100억원이 추가 반영돼 연구시설장비 도입 등 학사 운영 정상화에 기여하게 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28억원, 석유화학 산업 위기 대응 지원 34억원, 마른김 가공공장 시설개선 지원 60억원, 재해위험지구 개선 78억원 등도 포함됐다고 한다.

아무쪼록 이번 정부의 2차 추경이 침체된 광주·전남 지역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

광주 광산구 고용위기 지역 지정해야

광주 광산구가 정부에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촉구했다고 한다. 23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심의, 가결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키로 한 것이다.

또 정부에 고용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도 건의했다. 이는 최근 3년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와 대유위니아 주요 계열사 파산 등이 겹치면서 지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사실 광산구는 그동안 광주시 주력 산업인 자동차·가전 산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광주산단 입주업체 5149곳 중 절반이 넘는 2653곳이 광산구 산단에 있고 지역산단 종사자 수 7만943명 중 69%인 4만 9129명이 종사하고 있을 정도였다. 광주 제조업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 잇단 악재로 심각한 고용위기에 봉착했다.

광주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연간 생산 손실은 약 6조원, 부가가치 손실은 2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고 취업자 감소 또한 1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220여곳 중 절반이 넘는 112개소가 광산구에 위치해 있고 관련 종사자 수도 약 5000명에 이르고 있는 상태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이같은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또 김치냉장고 '딤채'를 생산하는 ㈜위니아(옛 위니아딤채) 등 대유위니아 사태도 심각하다.

5개 주요 계열사가 매각되거나 법원의 파산 선고로, 생산가치 3조 5000억원과 부가가치 1000억원, 취업자 1만3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산구 지역경제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산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신청이 지역경제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니만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정치부 370-7010 경제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사진부 370-7050
논설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